

[여시재 발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과 정책방향

2019. 8. 9.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Korean TaxPolicy Association

발표자 약력

오문성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법학박사(행정법/조세법)
경영학박사(회계학/세무회계)
행정학박사과정수료 (정책학)
경제학 박사과정(재정학)
심리학석사 (상담심리학)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목 차

- I. 상속세 폐지논란
- II. 증여개념의 확장(완전포괄주의)
- III. 가업상속공제제도
- IV. 상속세 계산구조
- V. 정책방향

목 차

I. 상속세 폐지논란

상속세의 과세목적과 근거

- 상속과세는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는 사회를 전제로 한 조세제도이고 사유재산제도 자체와 그 근거를 같이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사회정책적 목적에는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과 富의 분산촉진이 있음
- 富의 분산 촉진을 도모하는 후자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더 중시됨
-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제정됨
-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에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할”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로 OECD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나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017년 기준)로 세수의 비중은 크지 않음
소득재분배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과세하고 있는 상황임

상속세 반대 근거

• 이중과세

-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상속재산의 원천은 소득인데,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후에 축적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또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하는 대표적인 이중과세임

• 기타

- 상속세는 사망세(death tax)의 성격을 띠고 있어 부도덕한 세금임
- 경제적 성공에 대한 징벌
- 경제성장저해, 경영권위협, 낭비적 행태 조장, 거액의 납세순응 비용 발생, 교묘한 조세회피 방법 유도

상속세 찬성 근거

- **富의 분산**
 - 상속과세제도는 富의 집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동 과세제도를 통해서 富의 불균형 상태가 고착화하는 것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됨
- 상속세제는 개인의 소득과세에 대한 보완세제이다.
 - 상속세 과세대상의 많은 부분이 피상속인의 미실현자본이득 이므로 과세해야함

외국의 상속세 주요 현황

• 미국

- 부시 행정부는 2001년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EGTRRA)”을 제정하여 2010년 12월 말 상속세를 잠정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
-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RUIRJCA)”를 입법하여 2010년 잠정 폐지되었던 상속세를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되도록 부활시킴

• 독일

- 2008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 상속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였으나, 201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율을 인상하여 강화

외국의 상속세 주요 현황

- **일본**
 - 2002년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개정을 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상속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공제를 줄이고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2015 적용분부터 상속세최고세율 55%로 인상
- **영국**
 - 영국의 상속세는 1986년까지는 자산이전세(capital transfer tax)라는 명칭에서 상속세(inheritance tax)로 명칭이 변경됨
증여세는 따로 없으며 자본이득차원에서 과세가 이루어짐
-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은 2004년,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 제도를 폐지

상속세폐지문제의 소결

- 상속과세제도의 사회정책적 의의가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근래에 이르러 일부 학자들은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 상속세폐지의 문제는 사실상 대체입법(자본이득세과세 등)의 문제임
-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에서도 자본이득세 등 대체입법을 마련하여 과세 하고 있음(캐나다, 호주 등)
-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후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점에서 논리적으로 우월(이중과세의 논쟁에서 자유로울수있음)하여 장기적인 지향점으로 잡을만하지만 현재로서 상속세를 폐지한다는것 자체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수 있어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함(p17. 호주의 사례참조)
- 단기적으로는 현 상속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초점을 맞추어 과세하는 유산세제도는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상속인의 응능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맞지않아 유산취득세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목 차

I. 상속세 폐지논란

II. 증여개념의 확장[완전포괄주의]

III. 기업상속공제제도

IV. 상속세 계산구조

한국의 상속세및 증여세법 변천

- 1950년 3. 22. 법률 제114호로 상속세법이 제정, 1950. 4. 8. 법률 제123호로 증여세법이 제정
- 이후 상속세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
- 1996년 12.28. 법률 제5193호로 개정
 - 전면적인 개정으로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골격을 갖추.
 - 세목(稅目)도 상속세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함)으로 변경하여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03년 12월
 - 완전포괄주의 도입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규정

-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구조

- 상증세법 제 2 조 제6호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규정
-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3에서 개별예시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확장된 증여개념하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실상의 경제적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유형을 예시하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판례

대판 2011.4.28 2008두 17882
우선매수청구권은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예시규정 어디에도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지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과세대상을 인정함으로써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직접적용에 의한 증여세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했고 계산규정의 합리성도 인정
서울행법 2012.7.26 2012구합4722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직접적용에 의한 증여세부과가 가능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볼수 없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대판 2015.10.15 2013두13266판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미국

- 완전 포괄주의 채택

U.S. Code § 2511 – Transfers in general

(a) Scope

Subject to the limitations contained in this chapter, the tax imposed by section [2501](#) shall apply whether the transfer is in trust or otherwise, whether the gift is direct or indirect, and whether the property is real or personal, tangible or intangible;

U.S. Code § 2512 – Valuation of gifts

(b) Where property is transferred for less than an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then the amount by which the value of the property exceeded the value of the consideration shall be deemed a gift, and shall be included in computing the amount of gifts made during the calendar year.

일본

- 유형별 포괄주의
 - 일본 상속세법 제9조에서 “이익”의 가액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이는 포괄주의 성격으로 판단
 - 증여의 개념을 민법상 증여로 한정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실질이 증여와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신탁, 보험, 채무면제익 등과 같이 그 유형을 예시하여 이를 증여의제 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법 제9조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지불로써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익을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포괄주의 형태의 규정을 가지고 있음

독일

- 제한적 포괄주의
 - 독일의 상속증여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발생한, 면세대상이 아닌 부의 증가는 과세대상인 재산의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취득과세형)
 - 독일의 증여세는 순자산 증가설 의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임

증여세 폐지국의 대체입법

- 캐나다
 - 증여시점과 사망시점에 수증자(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자(피상속인)가 소득을 실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
- 호주
 -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처분에 따라 자본이득이 실현될 때까지 피상속인의 basis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과세이연이 이루어지며
 - 증여의 경우에는 유상거래와 동일하게 시가로 처분된 것과 같이 보아 자본이득을 계산하여 과세함

위헌 논란

- 위헌론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의 개념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특히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증여에 해당
 -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것이 환가되지 않은 이상 수증자의 고유 소득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응능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위헌 논란

- 합헌론
 - 포괄증여의 대상이 되는 거래나 행위는 객관적으로 예측가능
 - 법관의 법보충적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뜻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 거래, 행위에 대하여 과세요건 해당성 여부를 충분히 결정지을 수 있으며,
 -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입법은 다양하면서도 가변적인 사항에 대한 합목적적인 선택의 문제로서 변칙 증여를 포함시키는 불확정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하므로, 현행 포괄규정이 합리적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과잉과세 우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을 집행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과세는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이 하위법규에 위임 입법되지 않았고,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제33조 내지 제42조의3 규정을 통하여 위임된 각 시행령 조문의 과세대상과 과세가액 산정방식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도 유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음.

증여재산 가치의 산정 문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와 개별예시규정과의 관계: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증여의 개념을 대폭 확장해 놓았지만
증여예시규정의 요건이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계산근거규정으로
준용하려고 한다면 납세자측에서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음
-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분”이 증여재산가액인데, 증여재산 가액의 합리적계산방법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음
-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산정 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재산 의
평가에 관한 것이고,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산정 규정은 아님

예시규정의 확장과 명확화

- 현행 상증세법 제 2 조 제6호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3에서 개별예시규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 예시규정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며, 계산방법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여 적용상의 자의성을 줄여야 함

목 차

- I. 상속세 폐지논란
- II. 증여개념의 확장[완전포괄주의]
- III. 기업상속공제제도
- IV. 상속세 계산구조

현행 규정

-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피상속인이 **10년이상 20년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그 금액이 200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20년이상 30년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 을 한도**로 한다

현행 규정

- 가업요건(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피상속인 요건(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현행 규정

- 상속인 요건(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삭제 2016.2.5 개정)
-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현행 규정

-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유류분상속재산은 제외
 -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는데, 주식에 대한 평가는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별도로 평가

현행 규정

- 공제금액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200억 원,
 -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에는 300억 원,
 -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에는 500억원

현행 규정

- 사후관리(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기간을 고려한 추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019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정
사후관리기간 단축	• 10년	• 7년
업종변경범위 확대	• 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위원회승인하에중분류밖변경도허용
자산유지의무* 완화 *20%이상처분금지	• 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등 처분 예 외 허용	• 불가피한 처분 예외 확대 * (예)업종변경에 수반되는 처분
고용유지의무 완화	• 매년 정규직근로자 80%이상 유지 • 사후관리기간 평균 정규직근로자 100%이상 유지(중견기업은 120%)	• (좌 동) • 중견기업도 120%→100%
불성실기업 인 가업상속 배제	• (신 설)	• 상속인·피상속인이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독일

- ①사업용 자산의 85%를 공제받는 경우의 요건
 - 첫째는 상속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승계 후 5년 동안 그 가업승계대상자산과 함께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 둘째로 승계 후 5년 동안 고용의 대부분을 계속 유지(5년간 급여총액은 승계가 이루어진 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하여야 하며,
 - 셋째로는 가업승계대상 자산 중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 수동자산(passive asset)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됨.

독일

• ②사업용 자산의 100%를 공제받는 경우의 요건

- 첫째는 상속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승계 후 7년 동안 그 가업승계자산과 함께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 둘째로 승계 후 7년 동안 고용의 대부분을 계속 유지(7년간 급여 총액은 승계가 이루어진 연도급여총액의 700% 이상)하여야 하며,
- 셋째로는 가업승계대상 자산 중 임대자산·투자자산 등 수동자산 비율이 10%이하하여야 함.

(참고) 2014년 12월17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가업상속공제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공제범위에 관한 요소들이 헌법에 불합치(평등권침해)하는것으로 판결함

일본

-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 3에 의거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를 시행
 - 후계자인 상속인 또는 증여받은 자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등을 경영자인 피상속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납세유예제도”가 적용
 - ① 후계자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중 주식 등의 과세가격의 80%에 상응하는 세액을 경영승계상속인이 사망하는 날까지 납세유예하거나
 - ② 후계자인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중 주식 등에 대응하는 증여세를 일단 납세유예하고, 5년 이후에는 주식 등의 양도비율에 따라 유예세액을 납부해야 함

미국

- 1997년도에 가업상속공제(estate tax deduction for qualified family owned business interests : QFOBI deduction)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3년 1월 [납세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이 통과되어 영구히 폐지됨

영국

- 기업상속관련 세제지원으로 사업용자산공제제도 운영
- 사업용 자산공제는 「상속세법」 제 103조-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의 자산종류와 소유기간에 따라 주된 사업목적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중요사업자산의 승계에 대하여 상속세과세 표준에서 일정부분을 공제 (상속직전에 피상속인이 2년간 소유)
 - 공제율은 상장주식및 사업용고정자산은 50%,지분및 비상장주식은 100%)
 - 대상자산인 중요 기업자산이 승계되어야 하고 전부 또는 대부분 사업목적에 기여하여야 하나, 승계시점에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허용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단기적 측면: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한다는 측면과 일반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하지만 기업활동이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현재의 경제환경에서 현재의 가업상속공제제도하에서는 경영권유지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짐.

- 피상속인 요건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하는 조건은 기간을 7년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2014년 현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은 34.3%)---2019년 개정안에 7년으로 반영됨
- 지나친 고용 유지규정은 기업의 적절한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완화할 필요성 있음---2019년 개정안에 일부완화됨
- 가업자산의 처분제한 규정은 경영의 판단에 따른 사업다각화 등 변화되는 경제 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완화할 필요성 있음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방안

장기적 측면: 다른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공제제도 보다는 과세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예 후 가업자산 처분 시 처분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거나, 10년 혹은 20년 등 장기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목 차

- I. 상속세 폐지논란
- II. 증여개념의 확장[완전포괄주의]
- III. 가업상속공제제도
- IV.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세율 구조

- 한국 : 최저 10%, 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
- 미국 : 최저 18%, 최고 35%의 10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
- 독일 : 최저 7%, 최고 50%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
- 일본 : 최저 10%, 최고 5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
- 대만 : 10% 단일세율

증여세 세율 구조

- 한국, 미국, 독일 및 대만은 상속세와 동일
- 일본 : 상속세와 최저세율 및 최고세율이 동일하지만 과세구간은 상속세에 비하여 좁게 되어 있음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공제 금액

- 한국 :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최소 5억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한도 2억원 등.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누적하였을 때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3천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 미국 : 평생 동안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543만 달러(약 60억원)를 이전할 수 있음(기본공제로 공제됨)
- 독일 : 상속세 및 증여세(10년간 누적함)가 각각 배우자 공제 75만 6천유로(약 9억5천만원), 자녀 공제 최소 40만유로(약 5억원)
- 일본 : 상속세 최소 3천6백만円(약 3억6천만원)이상, 증여세 매년 110만円(수증자별, 약 11백만원)

최대주주 할증평가

- (현행)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

최대주주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은 2020년까지 할증배제)
50%이하	20%	10%
50%초과	30%	15%

- (2019년 개정안)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일반기업	중소기업
20%	0%

목 차

V. 상증세정책방향

상속 증여세 대한 정책방향

-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소득세율수준보다 낮게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
-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세구조에서 유산취득세구조로 변경
-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수 있게 호칭을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기업규모, 업종규제등을 완화해야함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으나 현행 상증세율 자체가 워낙 높은 상태라 추가적으로 할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되며 적용을 해야 한다면 상증세율을 인하한 상태에서 할증평가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배주주및 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지배주주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것이 논리에 맞음 (미국,영국,독일, 일본 등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 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한 할인평가를 적용함)

참고자료

- 김용민,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 제9차 조세정책학회 세미나, 2019
- 오문성, “상증세 및 증여세법 개선방안,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2015
- 오문성, “상증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
가업승계활성화와 국민부담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2019

감사합니다